

일본 전자정부

Electronic government in Japan -

김 남 수*

목 차

- I. 서 론
- II. 국가 전자정부 전략
- III. 일본 전자정부와 전자지자체를 위한 주요 전략 내용
- IV. 전자정부와 전자자치의 응용기술
- V. 참여자
- VI. 실행 통제/가이드
- VII. 결론

I. 서 론

오늘날 공공행정의 온라인화와 전자정부의 축진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각 국가들은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전자적 처리과정과 디지털 과정을 수립하는데 서로 경쟁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전자정부의 축진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및 제도적 시스템, 제도적 배경, 전자정부 전략 그리고 실행과정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도 1980년대 이래 행정개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행정개혁의 축진과 발전은 중요한 아젠더가 되고 정치적 슬로건이 되었다. 행정개혁과 더불어, 정부 서비스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가 언급되고 실행되고 있었다. 최근 일본

* 제주한라대학 복지행정과 부교수

행정시스템은 상당히 개혁되었다. 행정개혁의 다양한 조치들(예, 규제철폐, 민영화, 중앙부처 개혁, 독립 행정 기관의 합병, 지방정부의 분권화 등)이 계획되고 실현되었다.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전자 일본(e-Japan)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화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일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체제와 사법부

일본은 하나의 헌법에 의해 2개의 자치 지방정부를 가진 독립 국가이다(국가와 지방공공기관: 군, 도도부현, 자치구인 Shi, Cho, Son). 정부는 연방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주는 다른 법적, 행정적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지방정부(도도부현과 자치구)

일본 지방정부시스템에 의하면(쓰지, 1984; 이소자키, 1997; 엘 카알, 2000), 3개의 정부 즉 중앙정부와 2개의 지방정부(주, 도도부현, 자치체인 시·읍·촌)를 두고 있다. 일본 헌법 8장에 지방정부 시스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명백하게 정부의 주요 원리 중 하나이다. 헌법 94항에 지방 공공 단체의 권한 즉 도도부현과 자치구(LPEs)에 언급하고 있다.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권, 행정에 대한 실행권과 법에 의한 지방규제 실행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는 영토 내에서 특별한 지역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단체이다. 일본 거주자들에게 회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자치구의 기본 기능은 거주자들에게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 내에 공공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의해 규정된 자치권한을 주고 있다.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공법인의 자격이 부여된다(1947년 4월 17일 지방자치법 67항). 이 법은 자치구를 2개 즉 일반 자치구와 특별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다. 이 법은 일반 자치구내 2개 층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LPEs의 상위 층은 도도부현과 47개 자치체로 구성되어 있다. 도도부현은 자치체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LPEs이다. 자치체는 거주지역내 기본 LPEs이다(시, 읍, 촌; 3,218 개 지자체, 2002년 4월 1일). 그들은 도도부현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지방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도도부현은 다음과 같은 업무

를 관장하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지역 업무 둘째, 전체 통일성을 요구하는 업무 셋째, 자치체의 연락 및 조정과 관련한 업무 넷째, 자치체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난 업무 등이다.

LPEs(도도부현과 지자체)는 입법부로서 의회와 집행부(도도부현의 경우 도지사 와 지자체인 경우 시장), 집행부로서 행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는 조례(규칙 등)와 예산과 같은 문제를 결정한다. 집행부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한다.

일본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옹호하고, 지역적으로 분권화된 행정자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지방행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가능한 한 LPEs로 이전하고 있다. 일본 헌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매우 강화되어 있다. LPEs는 상당한 자치 권한이 주어졌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덜 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LPEs의 재정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LPEs가 예를 들어 전자정부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중앙정부가 상당량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조직

한편으로, 일본 중앙정부는 많은 지방자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조직은 대략 'block' 수준의 지방자치 조직, '도도부현' 수준의 지방자치 조직, 그 이하 지방자치 조직 등으로 나누어졌다. 1996년 말에 일본 정부에는 233개 block 사무소, 601개 도도부현 사무소와 거의 25,600개 지방자치 조직(우체국과 다른 약 5,600개 단체) 등이 있다. 중앙정부 관료 중 약 60%가 이러한 지방자치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행정관리연구소, 1998). 일반 공공업무로서 우체국, 세무서와 운송 사무소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

1999년 11월, 의회는 국가주도 제도들을 독립된 집행기관 혹은 준 정부조직으로 개혁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정부부처와 기관의 재조직화 일환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독립된 행정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월 이러한 행정개혁은 현재의 23개 정부부처(부처와 기관 등)를 13개 정부부처로 재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 6월 중앙정부 개혁법이 제정되어, 2001년 1월에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내각 및 12개 부처와 기관으로 재조직화하였다. 따라서 2001년 1월에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편서비스 업무를 책임지는 새로운 조직이 만

들어졌고, 새로운 정부와 제후 지자체(우편 공공지자체)로 2년 후에 이전되었다.

3) 공공 지자체와 준정부 조직

아울러, 기업들 혹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준정부 지자체의 형태가 있다. 첫째, 공공 지자체(77개, 2002년 1월) 둘째, 독립 행정 지자체(59개, 2002년 6월) 등이다. 공공 지자체와 독립 행정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다. 재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비즈니스 업무는 적절하게 부처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감독되어 있다. 국가 기금 지자체에는 국가가 임명한 개인 조직(사적 지자체 혹은 사람)들이 공공 업무를 집행한다(관선 지자체, 관선 관리). 원래 이 조직은 정부조직이 아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그들은 국가 행정을 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준정부 지자체들은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전략에 중요한 대상들이다. 이러한 준정부 지자체들의 정보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4) 국가 수준의 다양한 입법부

일본 헌법 94항에 LPEs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지방공공 조직체들은 재산, 업무와 행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법에 의해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예술 2-1에 의하면, LPEs는 자신의 자치업무와 함께 국내법 및 내각 명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업무가 중앙정부에 유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각 LPEs는 자신의 입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가지 형태 즉 조례와 규칙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채택되고, 규칙은 사법권 범위내 업무에 대하여 LPE의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공포되어 진다. 입법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조례가 개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집행부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는 항상 규칙에 의해 다루어진다.

비록 LPEs에 대한 자치가 헌법적 보장과 국가 수준의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LPEs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있다. 국가 정책과 중앙 정부가 상위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자치제의 조례는 도도부현의 조례를

어기지 못하고, 도도부현의 조례가 국내법을 어기지 못한다.

LPEs에 대한 업무와 활동의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상황, 지역적 차이, 재정적 제한, 기타 요인 등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정부의 업무와 LPEs에 속한 업무간의 차이는 확실하지 않다. 지방자치법에는 사법적 업무, 우편서비스 업무, 교육과 연구 등에 대한 국가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공하고, LPEs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LPEs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치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집행부에 위임받는 업무 등이다. 자치업무는 3개의 카탈로그로 나누어진다. 즉 지방업무, 중앙정부에서 LPEs로 위임된 업무와 규제 업무 등이다.

지방자치 원리에 따르면, 자치정부와 도도부현의 행정조직과 개혁은 LPEs 자체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LPEs의 자치업무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 행정 개혁과 도도부현과 지자체 행정서비스의 정보화와 디지털화에 대하여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비법적인 규제와 비공식적 제도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래 동안, 심지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LPEs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5) 행정에 대한 사법부

각 정부, 중앙정부와 도도부현과 지자체 LPE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행정업무와 LPEs에 대하여 지방자치 규제아래 조례에 의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내각과 정부기관들은 스스로 지방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은 일반 공공기관에 국가 정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헌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LPEs는 법에 의해 국가업무(LPEs에 위임된 국가업무)를 수행한다. LPEs에 위임된 국가업무 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관련 내각은 도도부현 지사들에게 업무활동을 수행하도록 직접적으로 명령한다. 만약 지사들이 이러한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그는 내각에 의해 스스로 지위에서 해임된다. 유사한 상황에서 시장도 지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해임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정부는 LPE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000 분권화 개혁에 의해 이러한 일련의 '정부기관 위임업무' 시스템은 폐지되고, 국가로부터 '조례 위임 업무'('법적으로 위임된 업무')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심지어 2000 분권화 개혁 이후, LPEs에서 공무원들의 정신은 이전 시스템과 별 차이없이 달라진 것이 없다.

6) 국가 - 시민간 접촉

일본 행정은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국가행정과, LPEs에 의해 수행되는 지방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교관계, 국방과 사법 등과 같은 업무는 본래의 기능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복지서비스, 건강과 위생, 공공업무, 산업증진, 소방 서비스, 경찰 업무 등 일상 업무와 매우 연관된 업무들에 대한 의무들은 중앙정부와 LPEs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은 주로 도도부현과 지자체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책임을 진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업무, 물 공급과 하수업무, 위생시설, 가난한 자와 어린이 복지업무에 대한 사회 안전 활동과 거주자들에게 일상적인 기본 삶의 서비스 즉 현주소와 본적 주소 등록업무 등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의 일상적인 삶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공공행정들이 가능한 한 LPEs에 의해 대부분 수행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LPEs 능력에 벗어난 업무들을 관리한다. 중앙정부, 도도부현과 지자체들간의 업무 기능의 배분은 사실 매우 모호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하고, 2가지 LPEs의 기능과 지위를 보다 투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7) 모든 정부수준의 조정과 협력(자치/지역, 국가)

중앙정부와 LPEs간의 관계

일본 중앙정부와 LPEs간 관계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통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록 LPEs가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헌법적 원리에 근거하여 LPEs는 자치적인 통제 실체이고 결코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중앙정부의 협력과 최소한의 간섭이라는 원리를 지녀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속에 기술적인 충고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국가적인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통제와 감독을 조정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오래 동안 LPEs에 대하여 강력한 중앙집중식의 통제와 가부장적인 간섭을 시도해 왔다.

LPEs에 위임된 국가 업무

지방자치법을 수정하기 이전에 집행부 즉 지사와 시장 그리고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그들에게 위임된 국가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중앙정부 기관의 역량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정부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이러한 업무들은 ‘LPEs에 위임된 국가업무’ 혹은 ‘공공기관 위임 업무 또는 기능’ 들이다. 이러한 업무들은 집행부 즉 지사 혹은 시장에 위임되거나 법적 조항에 의해 LPEs의 다른 집행부(즉 선거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공안전위원회) 등에 위임된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권한에 의한 내각 명령에 의하거나 중앙정부 혹은 다른 LPEs(즉 도도부현에서 지자체의 시장까지)에 의해 위임된다. 이러한 업무들은 LPEs 자체의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위임된 중앙정부나 다른 LPEs의 업무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LPEs의 일상적인 행정과 차이가 없다. 또한 지방예산은 LPEs에 위임된 국가업무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업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경우에 관련 내각의 지시에 의해 관리되고 집행되어 진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기능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위임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집행부는 법적 절차에 의해 해고당하게 된다.

지자체 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규칙대로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위임된다. 역량 면에서 그들은 독립권한이 없고 중앙정부의 행정 도구로 취급받는다. 지방자치법의 수정 이전에 중앙정부의 관련 내각에서 직접적으로 위에 언급된 위임업무들을 수행하도록 도도부현 지사에게 명령하였다. 이러한 많은 업무들이 전후 시기에는 매우 폭증하였다. 1980년대 말엽에 상당한 관련 법률들이 거의 2,200개 법률에서 550개가 발효되었다. 도도부현의 모든 행위 중에서 70-80%가 이러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지자체인 경우에는 50-60%가 된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직적인 통제와 감독이 지사에서 시장에 이르는 내각으로부터 이루어져 왔다(신토, 1984). 이러한 시스템에서 중앙정부는 LPEs를 통제하고 있다.

재정적 원조와 의존

또 다른 통제 메카니즘은 재정적 시스템 특히 보조금 시스템이다. 이는 LPEs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복잡한 장치이다. 그리고 이는 지방 정책결정과 행정의 조정을 혼란스럽게 한다. 중앙정부와 LPEs간의 관계는 매우 가깝게 얽혀 있다. 거의

LPEs 전체 지출의 60%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원천에 기인한다. LPEs로의 재정적 이전에는 지방 분배 세금 보조금과 중앙정부 지출이 포함된다. 지불은 중앙정부의 내각에서 이루어진다. LPEs에 대한 가장 자치적인 이윤 원천은 지방세(거의 30% 혹은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이 세금은 중앙정부 지출(거의 15%)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분배 세금 보조금이 거의 20%와 지방 부채가 거의 10%이다(지방공공 재정 화이트 보고서, 2003).

일본 지방분배 세금 보조금은 LPEs내에 세금 원천에서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LPEs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정부 서비스를 유지해 준다. 중앙정부 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특별한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LPEs를 지도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 30%의 자치권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 지방세가 LPEs의 전체 이윤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LPEs는 기본적으로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에 있다.

인사교류

중앙정부와 LPEs간 인사교류는 중앙정부와 LPEs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조직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1996년 8월 15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적교류 숫자는 상당히 증대하였다. 1,190명이 중앙 내각과 공공기관에서 LPEs로 전보되었고, 657명이 LPEs로부터 중앙 내각과 공공기관으로 전보되었다(행정관리기관, 1998). 2001년 8월 15일 인적 교류 숫자는 각각 1,606명과 1,680명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일본에서는 LPEs에서 다루어지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사회보험과 고용안전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정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도도부현 경찰조직의 고위 공무원들은 유사하게 LPEs 행정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인사교육 시스템에 의해 중앙정부는 LPEs에 대하여 강력한 인적, 비공식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공식적 지도(중앙정부의 LPEs에 대한 행정적 지도)

중앙정부는 LPEs를 조정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지도 및 추천 등의 방법

을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LPEs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업무를 분권화하기 위하여 현 지방자치 내각에서는 LPEs에게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LPEs는 행정개혁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였다. 1997년 7월 31일 모든 도도부현과 거의 90%의 자치체가 이러한 행정개혁에 대한 새로운 기본 지도시스템을 채택하였다(행정관리기관, 1998).

현 지방자치(현재 MPHPT) 내각은 지방자치정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보조금 관련 결정과 프로젝트와 관련한 파견, 순환, 구두 충고 등을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다양한 관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부적절한 성과나 국가법, 규제, 내각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세기 말 19년 동안 2000 분권화 개혁이 실행되었다. 분권화 촉진법이 1995년이 수립되었다.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과 함께, 제도적인 분권화가 부분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개혁 시스템과 함께 ‘LPEs에 위임된 국가업무’ 시스템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의존의 관습 때문에, 현재 LPEs는 e-자치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하고 비공식적 재정적 통제에 있다.

국가행정의 조정

현재 관리조정 공공기관은 내각의 관리와 조정에 책임을 지고, 행정업무의 전체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특히 기본행정시스템의 관리와 행정개혁의 촉진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4월 공공기관은 내각의 지부로서 MPHPT를 합병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 개혁의 결과로써 MPHPT는 국가행정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 내각은 MPHPT 속으로 합병되어, MPHPT가 LPEs를 조정하고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MPHPT는 모든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개혁을 위하여 조정, 조절,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 국가 전자정부 전략

1. 정보기술 인프라

1) 인터넷 이용자/접속률 등

일본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백서에 평가한 MPHPT(MPHPT, 2003)에 의하면, 2002년 말 69.42백만 일본인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PC와 모바일 폰, PDA, 비디오 게임기의 이용이 전년도에 비해 24.1%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접속률이 54.5%이었다(이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 수치). 오히려 일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인터넷 접속을 하는 모바일 폰이 주요 도구로써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교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한다는 것이다. 62.46백만 명이 모바일 폰, 개인 핸드폰 시스템과 개인 터미널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2002년 말에 일본은 전체 모바일 폰 접속자 중 모바일 폰 접속자는 82.6%에 이르고 있다. 광대역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2002년 말 광대역 서비스 이용 인원이 19.55백만 명에 이르렀다. 광대역 이용자들은 69.42백만 인터넷 이용자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인구는 88.92백만 명(69.6% 접속률)에 이르고, 내년에는 그 중 59.67백만 명(접속률 46.7%)이 광대역 이용자가 될 것이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에 대한 시장 규모는 2001년에는 6.34백만 엔에서 2006년에는 41.95백만 엔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수립된 2003년 이후 특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 전자정부와 전자 자치정부에 대한 행정 실태

매일 1.2명 근로자들이 모든 국가 공공기관(교육부, 문화부, 스포츠부, 과학과 기술부 산하 국립대학은 제외함)에서 1개 PC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1개의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PC를 통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하여 PC 이용자의 거의 80%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다. 그 중 77.7%는 LAN에 접속되어 있고, 2.2%가 LAN 이상의 호스트에 접속되어 있다.

2001년 기간 동안에 2,751개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전년에 비하여 25.5% 증가). 또한 도도부현 자치정부에는 319,915개 PC(전년에 비하여 21.3% 증가), 지자체(시, 타운과 마을)에는 561,721개 PC(전년도에 비하여 45% 증가)가 있다. LAN 설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도부현 자치정부에는 100%, 지자체 자치정부에는 88.6%가 LAN이 설치되었다.

2.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전략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정보통신기술)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즉 전자일본(e-Japan)이다. 2001년 일본은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회 촉진을 위한 전략 본부를 설립하였다.

1)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시스템 도입

1959년 일본은 기상청에 자료 분석 처리를 위한 최초 컴퓨터를 도입하였다. 그 이래로 많은 자료 분석 처리 시설들이 사회보험행정, 우편요금, 자동차 면허 처리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의 내부 정보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결과적으로 1983년에 행정정보화에 대한 내부 내각 연락 협의회(이 후 '내부 내각연락 협의회로 개명됨)가 조직되었다. 이 협의회는 컴퓨팅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효율적이고 정보화를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행정 정보화-행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전자일본(e-Japan) 전략 기간에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행정을 정보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행정 정보화의 목적은 첫째,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급격하게 향상시키고 둘째,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행정관리의 품질을 개선하고 셋째, 전통적인 시스템을 재평가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행정에 관한 내부와 외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종합적인 행정에 대한 확실성을 요구하고, 좀 더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는 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채택하였다(이 후 기본 계획으로 명명함). 이 계획은 1994년 12월 25일에 내각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이후 행정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촉진을 수행하였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내부 내각 연락 협의회에서 ‘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한 동일한 실행계획’과 ‘각 내각 및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실행 계획’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첫째, 모든 내각과 공공기관에 LAN을 구축한다(1994년에서 1997년까지). 둘째, 다양한 내각과 공공기관 LAN들을 연결하는 WAN(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모든 스태프 구성원들에게 PC를 제공한다(1997년 말까지 완성). 이러한 관련 하드웨어와 인프라 구축 조치 외에 전통적인 서류 관리 규제와 내부 행정 처리 규제들을 조사하여 행정의 정보화와 디지털화로의 목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각 내각과 공공기관에 LAN과 WAN 구축, 행정 정보화를 위한 텔레커뮤니케이션 구축들은 기본 계획의 실행으로 급격하게 발전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구축들이 실행되고, 특별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행정 업무와 비즈니스 그리고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효율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행정 정보화에 미치는 환경요인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즉 인터넷의 급속한 파급, 전체 사회에 대한 정보화 향상, 전자 상거래 실행의 증가, 응용파일과 고지서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와 관련된 부담의 감축 등이다.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회의 촉진(1994-1996)

싱가폴은 1992년에 ‘IT 2000’ 개념을 도입하였고, 1997년에 자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광대역폭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994년에 유사한 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고, 전자 서명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일본을 앞지르는 ‘사이버 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94년 8월 2일 일본 총리 관저에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회 촉진 본부’(이 후 ‘IT 촉진 본부라 함)을 설립하였다. 1995년 2월 21일 일본은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회 촉진을 위한 기본 안내서’를 만들었다. 이 안내서에 의하면 공공 행정의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촉진되어야 하고, ‘기본 계획’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업무와 관련한 비즈니스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어

주기 위하여 보고서에 의한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행정 파일과 응용 절차들의 온라인화 및 디지털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과 함께, 제도 분석 조사에 대한 실무 집단이 IT 촉진 본부에 구축되었다. 따라서 '안내서 재검토 파일과 응용 절차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계획이 '내부 내각 연락 협의회'에 도입되었다. 시민들을 위한 증명과 확인 방법, 안전 조치와 온라인 지불시스템들이 연구되어 졌고, 이러한 행정 절차에 대한 디지털화가 촉진되었다. 따라서 어디든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1997년 2월 내각은 파일과 응용 절차의 디지털화 온라인 작업이 이루어져 비즈니스와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내각 결정, 1997년 2월 10일).

1997년 비즈니스와 일반 공공행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과급되면서 기본계획은 재조사되었다. '재수정된 행정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내각에 의해 수립되었다(1997년 12월). 재수정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안전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 조직의 리엔지니어링 촉진을 위하여 모든 보고서에 의한 행정관리업무를 전자적인 행정관리업무로 바꿔야 한다. 또한 정부는 21세기에 접어들어 '고도로 향상된 전자 공공행정 혹은 전자정부'를 실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사회적으로 IT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IT 이용을 촉진한다. 정부 정보의 온라인화를 구축한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정부 정보와 관련한 조회 서비스 즉 통합위치정보시스템을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응용기술과 보고서 제출을 전자적 행정 절차로 구축한다. one-stop 정부를 구축한다. 전자 조달 절차와 전자 이윤과 지출 절차를 구축한다.

둘째, 행정 운영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이고 업그레이드한다. 모든 정부에 WAN를 이용한다. 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서류의 시스템적 관리와 분배(종합적인 서류관리 시스템과 내부 내각 전자서류 교류시스템)를 구축한다.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셋째, 모든 정부에 IT를 촉진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행정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트라 내각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한다. 공공분야에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방정부와 연결한 일반목적 광대역 행정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단체와 다른 공공 기관들은 공공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한다. WAN을 이용함으로써 one-stop 정부를 구축한다. 열린 시스템 환경과 표준화를 촉진한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운

영한다. 상위 프로토콜에 대한 국제적이고 실질적인 표준화를 이용한다. 즉 이메일 프로토콜이다. 구조화된 서류 포맷을 위한 국제적이고 실질적인 표준화를 이용한다.

각 내각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각 내각에서는 정부가 IT의 광범위한 이용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비서들에게 제공한다. 즉 CIO들이 광범위한 IT 이용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촉진하도록 한다. 더불어 핵심 스텝 기능으로 CIO를 지원하고, 광범위한 IT 이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법적·기술적인 문제들 즉 전자서류의 안전한 보호, 응용기술의 증명기술, 응용기술과 보고서 절차의 온라인 서비스 조치 등이 적절한 법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도록 한다.

정부의 광범위한 IT 이용에 대한 종합적 촉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내부 내각 연락 협의회가 계속적이고 세밀하게 정부의 광범위한 IT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토론한다. 관련 내각간의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즉 IT 촉진 본부와의 협력,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이다. 연락과 협력 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정부에 걸쳐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IT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위임된 비즈니스 업무 분야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IT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정부의 one-stop 정부 운영과 거주자 기본도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다.

3) 밀레니엄 프로젝트

1998년 말에 소위 IT 전략은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중심축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일본 노령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 IT 등 다양한 조치를 하는데 소위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2500억엔을 투자 계획하였다. 오부치 총리내각의 자문위원회인 산업경쟁위원회에서 '초전자정부'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행정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공공행정에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 개념은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하여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1999년 총리 결정안)가 의결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의해 전자정부는 2003년 말에 현실화되었다.

1999년 7월 ‘초전자정부’의 아이디어는 원래 일본 경제단체연맹(keidanren)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연맹은 정부, 산업계, 학계와 공동 협력으로 산업경쟁위원회에 속해 있다. 아울러, 연맹을 통하여 일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고자 케이단렌(WAN)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정부조달, 응용기술, 세금 징수, 정부지출 등에 전자처리의 전면 도입 둘째, 정부서류의 전면 디지털화 셋째, 모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 공유된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넷째, 지방정부에 전자서비스 채택을 위한 일정의 구축 등이다. 정보 부문에 있어서 정부는 전자정부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에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컴퓨터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2003년에 정부는 8,800개 규제행위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규모 일본 전자 기업 즉 히타치, 토시바 등이 슈퍼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전자정부 아이디어의 실현방법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팀을 구성하였다. 2003년에 기업들은 이러한 사업에 250백만 엔 이상 지출하였다.

1998년 11월 IT 촉진본부는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회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재수정하였다. 재수정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4개의 목표 즉 전자상거래의 촉진, 전자정부의 실현, 정보리터러시의 증대, 정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구축 등이 기본 정책 목표로 결정되었다. 1998년 11월 ‘일본 재창출 계획’이 경제정책과 관련한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계획에 의하면, 일본 경제의 재도약과 재창출, 전자정부의 실현, 교육과 지방위원회의 정보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법적 지위 실현 등이다. 처음으로 2003년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 그 계획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기본 정책계획과 관련하여 2003년 3월 31일에 응용기술과 보고서 절차의 정보화 촉진 기본구상 등이 내부내각 연락협의회에서 채택되었다.

4) 전자 일본(e-Japan) 실현을 위한 입법부 패키지

행정적 조치이외에 다양한 입법적 패키지들이 수립되어 온라인 절차와 전자 증명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자서명과 증명 서비스에 관한 법률 즉 소위 ‘전자서명법’이 2000년 5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일본 전자서명법은 3개의 주요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소위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하는 효과이다. 둘째, 증명권한(CAs)에 대한 자발적인 신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

에는 자발적으로 신뢰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증명권한(CAs)에 대하여 임명된 개인 부조사관을 두는 것이다. 관련 내각에 따라 증명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증명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제공되었다. 전자서명법은 단지 개인 증명서비스 제공자에게 응용될 수 있다. 개인 전자서명은 자격을 갖춘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전자서명법 3항에 의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0년 4월 19일 상거래 등록법에 대한 수정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법무성의 임명된 상거래 등록권한 기관이 공공키 인프라(PKI)에 근거한 등록 기업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상거래 등록에 의하면, 4개의 협회(법적인 개인), 외국기업, 소매업자들이 등록되어 있다. 기업 보증을 한 이름과 주소, 관리 대표자 등이다. 상거래 등록 정보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등록이 전자적으로 서명조사의 수단이 되고 있다. 실체의 존재 즉 이름과 대표자, 전자증명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누구든지 임명된 상거래 등록 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증명 정보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2000년 10월 10일 법무성은 증명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이래로 법적인 대표자들이 상거래 등록에 근거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000년 11월 서류이전을 요구하는 종합적인 수정과 전자미디어 고용을 허가하는 의지로 인하여 소위 'IT 종합 법률'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방해하는 733개의 규제와 124개 법률이 있다. 이러한 종합 수정안과 함께 방해되는 법과 규제 즉 안전과 교류 법률은 주식미래무역에서 하드카피 안내서를 발행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5) 전자 일본(e-Japan) 전략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회 구축에 대한 기본 법

오부치 총리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모리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였다. 또한, 내각은 혁신적인 IT 이용을 촉구하였고, IT 전략 본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모리 총리는 정부 태스크 포스트 팀을 운영하였고, IT 전략위원회(모리 자문단)를 최우선 내각수준으로 조직하였다. 이러한 자문단을 통하여, 전자정부를 향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본부와 위원회는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회에 관한 법률 즉 종합적인 IT 법률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자일본(e-Japan)

전략의 초안이 되었다. 2000년 11월 27일 IT 전략위원회와 IT 전략본부와의 합동회의를 통하여 ‘기본 IT 전략’이 채택되었다.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회 구성에 대한 기본 법 즉 소위 ‘IT 기본 법’이 2000년 12월 6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일본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향상된 온라인 네트워크와 IT 인프라의 하나가 되었다. IT 전략본부와 IT 전략위원회는 총리 관저에서 합동회의를 통하여 개요가 발표되었다.

IT 기본법에 의하면,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수립하였다.

첫째, 행정의 디지털화(20항):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회 구성에 대한 조치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디지털화된 행정을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 이용의 확장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운용을 위해 다른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편리성을 개선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단순화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둘째, 공공부문에의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적용(21항):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회 구성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들의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다양화하고 개선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 의하여 일본은 2003년에 ‘온라인 정부’를 실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1년 여름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심각하게 온라인 정부 문제들을 다루고, 세계에서 가장 향상된 형태의 정보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 IT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최우선 IT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도록 IT 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와 시간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 법은 정부로 하여금 일본 발전을 옥죄는 정부 규제를 풀어 줌으로써 전자 상거래의 파급을 신속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하여 일본 정부는 총리의 이름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힘 있는 태스크 포스트 팀을 구성하였다. 태스크 포스트 팀은 내각뿐만 아니라 개인부문에서 최고의 IT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 법은 정부로 하여금 평범한 시민들에게 IT 기술을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커 등으로부터 순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일본(e-Japan) 전략(2001년 1월 22일)

2000년 7월 7일 모리총리에 의해 IT 전략 위원회가 구성되고, 2001년 1월 ‘전자일본 전략’을 수립하였다. 2005년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행하였다.

-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와 경쟁 정책을 수립한다.
- 전자 상거래를 촉진시킨다.
- 전자정부를 실현한다.
- 고품질 인적자원을 양성한다.

전략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선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안전하고, 쉽고, 위험이 없게 한다. 넷째, 가격이 적절하고, 높은 속도, 효율성을 제공한다. 다섯째, 국적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다. 정책은 세계 최고의 향상된 고속 인터넷(또는 무선) 환경을 수립하고, 마디가 없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은 중요한 전략 내용들이다.

첫째,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와 경쟁 정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인터넷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2005년까지 일반 국민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5년 내에 적어도 3,000만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한다. 또한 2005년까지 1,000만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시간 동영상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였다.

- 비대칭적인 규제를 도입한다(다른 새로운 공공 경력보다는 거대한 텔레콤 NTT에 강한 규제).
- 정부의 행정적 태도를 규제중심에서 사실적 체제검토 접근으로 바꾼다.
- 사용자 불만과 운용자 갈등과 같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별 부서를 만든다.
- 공공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 섬유조직과 같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원의 적절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한 규칙을 만든다.

- 경매시스템과 같은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분배의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조사하고 실행한다.

둘째, 전자 상거래를 촉진한다. 2002년에 정부는 전자 상거래를 방해하는 규제들을 수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 2003년에 전자 상거래를 증진시키는데, 1998년보다 10배가 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전자 상거래를 방해하는 규제를 재수정한다.
- 현재 법률을 투명하게 재해석한다.
- 전자 계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입법화한다.

셋째, 전자정부를 실현한다. 정부는 전자정부를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2003년까지 보고서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과 사업가들에게 디지털화 개념을 촉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내 공공행정을 디지털화한다.
- 개인부문에의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정보의 이용을 공공화하고 촉진한다.
-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고품질 인적자원을 양성한다. 인적개발 분야에서 정부는 30,000 명의 외국 IT 기술자와 연구자에게 2005년까지 일본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와 공공사이트에 쉽게 인터넷에 접근함으로써 IT 리터러시를 촉진한다.
- IT 강사, 기술전문가, 연구자들을 양성한다.(IT 관련 인적자원의 수준을 미국의 수준을 초월한다. 2003)

전자일본(e-Japan) 전략에 근거한 계획 수립

전자일본 전략에 근거하여 몇 가지 실행 계획들이 결정되고, 실행되었다. 즉 ‘전자일본 우선 정책 프로그램’(2001년 3월 29일), ‘전자일본 2002 프로그램’(2001년 6월 26일), 전자일본 우선 정책 프로그램과 전자일본 2002 프로그램의 촉진과 향상 등이다. 전자일본 우선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는 IT를 사용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합리화하고 통합하는 구조적 개혁을 착수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정부는 고도의 정보화된 행정을 의미한다. 주요 중심내용은 행

정서류의 전자적 개방과 비치, 계속되는 온라인 응용기술, 온라인 조달 절차, 종이 없는 내무 행정절차의 구축 등이다.

정부는 IT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업무, 회계, 일반 업무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 2003년부터 국민들은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행정절차를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통계나 조사활동 등의 파일처리와 같은 업무들이 IT와 함께 통합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쏟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개별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거주자 카드, 패스포트, 자동차 공간 등록업무 등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일된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고, 절차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낮은 직원 채용으로 인하여 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이 그들이 속해있는 내각과 공공기관에 상관없이 다양한 자료와 조사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IT 전략 본부는 전자일본 우선정책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국내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좀 더 다양한 기술적 향상과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 즉 전자일본 우선정책 프로그램 2002를 만들었다. 200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향상된 IT 국가에 속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5개의 목표를 만들었다.

- 세계에서 가장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인적자원의 교육과 개발을 촉진한다.
- 전자 상거래를 촉진한다.
- 다른 공공부문에 행정과 응용기술을 디지털화한다.
- 향상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안전과 실행가능성을 수행한다.

2001년까지 이미 100개 이상의 조치들이 실행되었다. 이 시기에 200개 이상의 조치들이 새로운 전자일본 우선정책 프로그램 2002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318개 조치들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정부의 발전과 전자 건강케어, 인텔리전스 교통시스템(ITS)과 GIS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IT 응용기술을 계속적으로 실행하였다.

- 2002년까지 모든 정부절차의 전자 파일에 대한 실행계획들이 각 내각에서 구축한다.

- 2003년까지 전자제안과 입찰 개방이 내각 사법부에 의해 모든 프로젝트에 도입하도록 한다.
- 지방정부에 의해 여건발급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를 위하여 표준 절차들이 2003년까지 중앙정부에 수행되도록 한다.
- 지방정부는 2002년부터 전자 지방정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응용서비스 제공자(ASP)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다.
- 200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향상된 ITS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도록 한다.
- 2003년부터 신뢰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 비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한다.

현재 전자적 지자체로의 길

‘IT 개혁과 함께 정보화 조치 촉진에 대한 안내서’(2000년 8월 28일)에 의하면, 현 지방자치 내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자적 지자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비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을 위한 개혁 등이다. MPHPT는 2005년까지 3,300개 지방정부에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에 의하여 내각에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지방정부들은 정부 관리, 학교, 공공시설들을 2005년까지 연결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부를 계획 수립하여, 세금 지출과 공공업무 입찰과 같은 행정업무의 98% 정도를 2003년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지방정부는 2003년까지 그들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95%를 처리하였다. 내각은 또한, 10,000개 지방정부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개인부문에서 40,000명을 IT 전문가로 훈련시켰다.

2001년에 MPHPT는 대규모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하여 5개 내지 6개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지방정부에 ‘전자적 지자체’로 지정하였다. 3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인부문으로부터의 아이디어를 통합하였다. 내각에 의하면, IT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정부서비스의 품질과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선택된 지자체들은 위치, 인구의 규모, 다른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내각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즉 원격의료 치료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포럼을 구축하였다. 다양하게 개인 기업들이 이러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3월 MPHPT는 이러한 실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자일본 전략II와 '전자일본 우선정책 프로그램 2003'

2003년 7월 2일 IT 전략 본부는 소위 '전자일본 전략II' 패키지를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제2단계 일본 IT 부흥을 위한 조치이다. IT 이용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1단계는 거의 완료되었다. 이 패키지는 이미 패널에서 추천된 후속 조치들으로써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추천된 조치들은 IT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7가지 분야로 창출하는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 음식, 라이프스타일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보처리업무,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등이다. 전에 추천한 조치들과 달리 IT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자일본II는 '활력이 넘치고, 안전하고, 강력하고, 편리한 일본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패키지는 비록 광대역 커뮤니케이션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IT 이용이 일본에서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안서에는 특별한 목적과 7가지 부문에 대한 대상 날짜가 적혀있다.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제안서에는 2005년까지 논스탑과 원스탑의 행정서비스 포털과 비즈니스/시스템 리엔지니어링 계획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모든 7가지 분야에서 제안서에는 일본은 2006년 전과 후에서 다른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앞서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의거하여 태스크 포스트 팀은 소위 '전자일본 우선정책 프로그램 2003'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366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들어있다.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중심의 원스탑 서비스의 실행들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2005년까지 전체 원스탑 서비스를 구축한다.
- 2005년까지 조정계획을 통하여 내부 행정 업무 및 시스템을 개혁한다.
- 2003년까지 CIO의 보조자로서 개인 IT 전문가를 이용한다.
- 2003년까지 개인이 공문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문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완성한다.

Ⅲ. 일본 전자정부와 전자지자체를 위한 주요 전략 내용

1. 전자지자체와 전자정부의 핵심으로써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Juki Net)

전체적으로 전자정부와 전자지자체에 대한 핵심 개념의 하나는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즉 소위 'Juki Net'로 이미 운영되고 있다. 2002년 8월 5일 발효된 이 시스템은 개인 즉 성명, 출생날짜, 성별, 주소 등에 관한 기본 자료들을 통합하였다. 거주자 등록과 가족 등록에 관한 업무들은 지자체의 책임이다. 지자체는 기본적인 거주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코딩화(주로 개인의 성명, 주소, 출생날짜, 성별 등)함으로써 모든 일본 지자체들에게 기본적인 거주자 등록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유일하게 선정된 11개 디지털 개인 숫자이다. 이 시스템은 기본 거주자 등록법에 대한 수정 법안에 포함되었다. 수정 법안은 1999년 8월 제정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신의 지자체에서만 아니라 다른 장소 즉 지자체 사무실과 우편 사무소 등에서도 '거주자 등록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주자들에게 자신의 코드, 성명, 주소, 성별, 출생날짜 등을 제공하고, 상당한 응용기술과 확인 절차 등을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통하여 지자체 출입을 자유스럽게 하였다. 사람들이 한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이동할 때 새로운 지자체 거주지에 등록만 하면 된다. 그들이 단지 왕래하는 지자체에 보고하는 문제점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거주자 등록 시스템은 모든 정부업무와 공공서비스에 I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전자일본 전략의 한 부분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들이 정부에 어떤 파일을 원할 때 즉 연금지출, 실업수당, 자녀양육 보조금 등을 요구할 때 마다 거주자 등록자료 복사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 사무소를 방문하는 시간을 줄여주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일본 전역에서 거주자의 기본적인 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시스템 개념은 전자정부와 전자 지자체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온라인 응용기술과 확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혹은 다른 행정사무소의 보고서에 의한 절차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거주자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다른 지자체 거주자들에게도 제

공되고 있음). 이러한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에 빈약한 시민들이 비록 네트워크 PC에 접근할 수 없거나 자격있는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을지라도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엄격한 확인과 입증 즉 자격을 갖춘 전자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절차들이 많다. 이와 같이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는 일반 공공행정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와 전자 지자체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이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확인시스템 역할을 한다.

중앙정보처리 장치(LASDEC)는 임명된 거주자 정보처리를 위한 국가 센터로써 설립되어, 개인의 확인 숫자들과 4개의 개인정보들을 관리하고 처리한다.

지자체들은 국가센터에 접근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개인정보를 얻는다. 거주자들은 또한, 통합 서킷 카드(IC 카드)를 얻는다. IC 카드에는 자신의 거주 지자체로부터 확인 숫자를 얻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또한, 다양한 공식면허 즉 건축, 부동산 중개인과 여행중개인과 같은 면허를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에 92가지 업무를 세분화하는데 국가센터에 접근하고 있다.

2002년 6월 6일 내각은 여권과 연금 응용기술, 자동 등록과 같은 온라인 행정절차를 확대하려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의 이용을 확대하였다. 2002년 8월 5일에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정부는 93가지 행정서비스와 절차들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여기에는 아동복지 이윤 지출과 건축면허 응용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제안된 법안에는 여권발급과 자동차 등 재산등록 등 171개 절차들이 있었고, 264개 절차로 점차 증가하였다. 2003년 8월부터 IC 카드는 원하는 모든 일본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거주자들은 카드를 가지고 일본 모든 지자체 지역에서 거주자 로그를 검색할 수 있었다. 예전에 이러한 카드 없이 거주자 지역의 지자체 사무실에서 등록 복사만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IC 카드에 자신의 특징을 첨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는 도서관 카드, 복지서비스 카드, 서명카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거주자 등록법에는 코드 숫자와 4개 종류의 개인정보를 넘어서거나 내각,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간에는 개인 정보의 교환이 금지되어 있다. 정보의 개인 프라이버시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재개정 법안에는 개인에 대한 행정정보의 상업적 목적 이용과 이러한 정보가 공무원들의 누수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었다.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구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2002년 가을, 정당에서 의회 개회 기간에 대폭적인 개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

켰다. 2002년 여름 이전에 반대 정당에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내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구축을 동결하도록 정부에 강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개 지방의회는 국내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의 실행 정지를 요구하는 문서화된 의견을 승인하였다. 59개 지방의회는 마이에와 토토리 지역에 있는 2개 의회와 시에 있는 19개 의회, 타운에 있는 25개 의회, 촌에 있는 13개 의회 등이다. 2002년 7월 2일 교토 뉴스에 의해 발행된 조사에 의하면, 일본 4/5 이상이 모든 시민들에게 7개 디지털화 확인 숫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2002년 8월 5일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83.2% 사람들이 이러한 조사에 응하였는데, 그들은 8월에 실행된 전자적인 기본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를 몰랐다고 말했다. 교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5.8% 만이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가 실행될 때를 알았다. 9.4% 정도는 이 시스템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다. 39.4%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약 21.6%는 이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29.1%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법조협회와 시민연합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정부통제 때문에 거주자 정보 네트워크를 연기하도록 요청하였다. 2002년 8월 네트워크가 발표되었을 때, 몇몇 지자체 즉 코쿠분치와 교토 스기나미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이 너무 남용되기 쉽다는 이유로 동조하기를 거부했다. 3.45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요코하마시는 거주자들에게 등록만을 허가하였다. MPHPT는 거부하는 행위나 요코하마의 선택적인 참여 정책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2. 전자 일본, 전자정부와 전자자치를 위한 인프라로써 PKI

1) 거주자 법에 대한 온라인 행정절차와 공공확인서비스

2001년 일본 정부는 ‘온라인 행정절차 실현을 위한 원리’를 결정하였다. MPHPT에 의해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2002년 7월 7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즉 온라인 행정절차법안, 전자서명과 관련한 지자체 인증서비스법안, 이미 언급한 법안들을 제출하여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의 이용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법안들은 2002년 12월에 실행되었다.

온라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들은 국가, 도도부현,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온라인 행정절차 즉 신청, 고지, 수납 등에 법적인 승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전통적인 보고서에 의한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장애를 없앴다. 이 법은 모든 9,089개 공식적인 신청과 등록 양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일본정부가 전자정부를 착수하는데 한 단계 가깝게 만들었다.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혹은 지자체-도도부현과의 협력) 인증 서비스와 등록된 비즈니스를 위한 정부인증 서비스 혹은 사적인 상업 인증서비스 등을 이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공공키와 공공키를 위한 인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거주자들에 대한 공공인증서비스 법안에 의해 지자체 거주자들은 지자체 당국에 의해 거주자 등록 정보에 근거하여 도도부현 장관에게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도도부현 CA로부터 인증서를 받는다. 도도부현 CA는 인증 등록업무들을 관리한다. 신청자들로부터 온라인 행정절차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당국은 도도부현 CA에 의해 온라인으로 인증을 처리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적인 인증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도도부현 장관은 하나의 개인단체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대신하고, 아울러 이러한 목적(임명처리 센터)을 위해 인증해 주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 토지 등록 접근시스템과 거주자 등록 시스템에 의해 이용된 메커니즘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지자체와 도도부현은 인증기관으로 필수적인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임명된 인증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에 가장 큰 자료창고 관리자가 될 것이다.

2) 전자서명과 인증 인프라 구축

서명법이 진행되고 난 1년 후에,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일본시장에서 수립되었다. 비공인 개인 인증서비스와 더불어, 2002년 10월 2일 16개 공인된 개인인증서비스가 있다. 서명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개인 인증서비스 기관과 더불어 일본에는 정부 인증서비스 기관들이 상당히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0년 8월 28일에 MPHPT에서 LPEs 정보화 본부는 LPEs 정보화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가이드라인에 의해, 도도부현은 2001년 말 공식적인 공공키

(PKI)를 만들었다. 2003년 말에는 지자체가 만들었다. 또한 공공인증서비스 법에 의해 도도부현과 지자체들은 거주자들을 위한 거주자등록에 근거한 협력적 인증 기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인증서비스들은 도장등록에 근거한 전통적인 보고서에 의한 도장인증시스템과 유사하다. 일본에서 인증서비스에 대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비공인과 공인된 개인 인증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서비스이다.

② 다음과 같은 기관에 의해 제공된 공공인증서비스이다. ②-1. 상업적 등록(상업적 등록인증기관)에 근거한 등록 비즈니스를 위한 상업적 등록기관으로서의 법무성, ②-2. 거주자(시민 PKI)들을 위한 지자체와 도도부현, ②-3. 자신의 인사관리 혹은 기관(조직적 PKI)을 위한 지자체와 도도부현, ②-4. 국가인사관리 혹은 기관(정부 PKI)을 위한 정부인증기관들이다.

인증서비스(①과 ②-1, ②-2)는 개인적인 비즈니스 혹은 일반 공공에 관한 서비스이고, 인증서비스(②-3, ②-4)는 공공행정 인사관리와 기관 서비스이다. 이러한 모든 인증 기관간에는 연결되는 인증기관을 설립하였다.(근원적인 인증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복수 구조 체계속에서 모든 시민들, 비즈니스인, 당국 그리고 인사관리담당자들은 개인적으로 공인이든, 비공인이든, 혹은 공공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든 상호 인증을 해 주고 있다.

개인 인증기관과 지자체 인증기관 모두 시민들을 위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간에는 경쟁이 발생할지 모른다. 만약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낮은 비용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 상업적인 인증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비즈니스를 위한 상업적 등록에 근거한 상업적인 인증기관과 정부 인증기관간의 관계는 똑같다. 일상생활에서 공공 인증서비스와 공공기관의 오랜 전통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 인증서비스는 법적으로 개인인증 제공자들에게 행정절차와 신청을 위해서만 사용하게끔 제한하고 있다. 독일과 비교하여 정부는 독일보다 강하게 촉진하고 지원해 주는 훨씬 많은 온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6월 18일 타케오 히라누마(경제, 무역, 산업부 장관:METI)는 공인된 전자서명을 한 공식적인 전자서류를 발행하는 최초의 내각 장관이 되었다. 내각의 지위를 나타내는 IC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그는 일본 외부무역 조직단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에 온라인으로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내각에게 무역 전시를 지원하라고 요

구하였다. 2001년 가을 METI는 개인부문 회사로부터 다양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국토, 인프라 및 교통 장관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항공사의 국내 항공요금에 대하여 온라인 보고서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3. ADMIX: 전체 행정정보 교환 네트워크(WAN과 LGWAN)

PC와 다른 정보장치의 구축과 인트라넷 내각과 기관간 LANs의 발전으로 행정 부서에서 행정정보화에 대한 공통된 수준이 보다 향상되었다. 1996년 말 내각과 기관에서는 1.2명 당 1PC 수준을 갖추었다. 이러한 PC는 24개 내각과 기관에서 LAN으로 연결되었다. 1997년 1월 WAN는 내각과 기관을 LAN으로 연결하고 운영하였다. 1997년에 27개 행정부서는 즉 내각과 기관을 포함하여 WAN으로 연결시켰다. 또한 지방 사무소에 PC와 LAN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종합적이고 광범위 행정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갖춘 WAN의 이용과 발전으로 행정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연결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공유 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텔레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제공하거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른 관련 시스템과 유연한 정보 교환을 갖춘 연결 장치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발전과 연결하여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과 신뢰 장치를 향상하고 강화하였다. 끝으로 모든 신청, 통지 등 다른 행정절차에 대하여 컴퓨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자 인증을 위한 전자서류와 기능의 원천기술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하였다.

2003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서류와 고지서 이동을 전적으로 컴퓨터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국 3,200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LAN을 구축하여, 현재 중앙정부 네트워크 즉 WAN(K-WAN)과 연결하였다. K-WAN는 1997년 1월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는 그 계획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행되는 행정업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정보의 배분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 믿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발표한 전자정부 계획을 보충하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2003년에 받았던 모든 신청서와 보고서를 온라인 처리하였다.

현 지방자치 내각은 '종합적인 행정네트워크'(지방정부 WAN: LGWAN)을 수행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정부는 모든 LPEs를 연결하였다. LGWAN는

전자정부와 전자 지자체를 실현하는 하나의 목표로 구축되었고, 최초로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1997년 11월)이 되었다. 소위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되었다(1999년 11월 2003년까지 전자정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LPEs의 정보화 향상을 위한 실험의 시작이었다). 또한 LGWAN은 ‘신청과 보고서 절차에 대한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 개요로써 중앙정부와 LPEs간 정보화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되었다.

관리 및 조정 기관이 47개 도도부현 정부와 12개 주요 도시 정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보다 지방기관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2001년에 도도부현과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2003년에는 보다 작은 지자체들을 연결하였다. 내각은 보조금과 다른 방법 등을 통하여 지자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방정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중앙정부 WAN과 연결하여 법령, 백서, 통계자료, 언론 발표집 등을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LGWAN의 주요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교환 서비스(전자서류 교환시스템)

둘째, 통계와 보고전송서비스(통계 처리시스템)

셋째,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일반 정보분야에서 제공된 시스템)

넷째, 조례와 규칙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지방법령 검색시스템)

다섯째, 고지와 순환 데이터베이스서비스(순환 검색시스템)

여섯째, e-FOLA에 대한 서류 인덱스서비스(e-FOLA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일곱째, K-WAN 검색시스템의 내용(법령과 백서 검색시스템)

중간 혹은 하위 LPEs에 대해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행정네트워크가 그들에게 ASP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충분히 기술적, 인적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LPEs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ASP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지자체의 촉진이 보다 활기가 넘쳐 초기의 비용과 운영비용을 절약하고, 시스템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 지자체의 촉진은 LASEDEC의 역할에 의존하여 LGWAN과 ASP 시스템의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IV. 전자정부와 전자자치의 응용기술

정보화 개혁을 통하여 관리 및 조정 기관은 행정업무와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단순화하고 개선하였고, 보다 향상된 행정관리를 달성하였다. 기술적 계산의 컴퓨터화, 대규모 및 표준화된 작업 수행, 또는 행정업무와 비즈니스 효율성의 단순화와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 행정 정보화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내부 관리와 공인/허가의 정보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였다. 행정업무와 비즈니스의 단순화와 효율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거나 내부 행정업무와 비즈니스에 대한 향상된 행정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 및 조정 기관은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화 목적으로 가지고 광범위 업무를 검토하는데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이용하였다. 아래로부터의 합의와 공식적인 결정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의사결정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하거나 정확한 정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행정업무와 비즈니스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 및 조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운영과 관리를 개인부문에 맡김으로써 아웃소싱을 촉진하였다. 전자 자자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다.

첫째, 시니어 케어보험 분류와 분배시스템

둘째, 토털 GIS

셋째,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시스템(1999년 8월 18일 수정된 거주자 등록법에 근거하여 2002년 8월 운영됨)

넷째, 도도부현과 지자체 세금징수시스템

다섯째, 재난방재정보시스템

1. 정부 포털

2001년3월 29일 일본정부는 중앙정부 사무소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정부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목적은 정보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는 발표문, 입법, 통계와 보고서 연보 등이다. 이 서비스는 www.e-gov.go.jp에서 접근할 수 있다. 내각과 12개 정부 장관(내각과 제휴된 기관들을 포함)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

를 가지고 있다. 2001년 말에 중앙정부 수준에서 공공단체들에 지원받는 1,310개 홈페이지가 있다.

지방정부 포털과 관련하여 LASDEC는 지자체들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ASDEC에 따르면, 2003년 10월 16일에 3,275개 LPEs의 3,385개 웹사이트가 LASDEC 일본 넷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다.

2. 전자파일: 신청

일반 공공업무 즉 신청파일과 고시업무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의 컴퓨터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공공업무에 부가되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1996년 9월 에 채택된 '신청과 보고서에 대한 행정절차 기준의 가이드라인(내부 내각 연락협의회에 의해 승인됨)에 의하여 8,397개 신청과 고시 중 871개 절차가 1997년 말에 컴퓨터화 되어 있다. 또한 행정개혁 프로그램에 의하여 행정업무와 절차에 있어 보고서의 단순화와 통일/공유 그리고 디지털화/축소함으로써 신청파일과 다른 형태의 파일과 관련하여 공공에 부담을 줄여주었다. 따라서 '신청과 다른 절차와 관련한 부담을 감소하는 조치'(1997년 2월 내각 결정)들로 인하여 1998년 말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신청과 고지와 다른 절차들과 같은 보고서들을 디지털화하고 축소시켰다. 현재에는 신청, 고지와 다른 절차들에 대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문제들은 편리성의 개선이다. 즉 신청 처리과정 시간의 확장, 자동화를 통한 24시간 리셉션시스템의 도입, 시스템 네트워킹을 통한 신청에 대한 지리적 제한의 향상, 접근성의 확산 등이다.

또한,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비축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증가하기 위하여 관리 및 조정기관은 윈스탑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즉 절차의 가이드와 지시, 필요한 행정정보의 비축, 시설물의 이용 가이드와 보전, 신청과 고지의 접수 그리고 결과 발표 등)를 제공하고 LPEs와 매우 가깝게 협력하고 있다.

신청과 고지 처리과정에 대한 전자 행정절차에 대하여 2001년 말 590개 온라인 신청과 고지가 있었다(5.3% 디지털화 비율). 2002년 말에는 3,895개 온라인 신청과 고지(35% 디지털화 비율), 2003년 말에는 10,868개 온라인 신청과 고지(97.7% 디

지털화 비율)가 있었고, 결국 모든 행정절차 업무를 디지털화로 완성하였다.

2001년 3개 부처, METI, 국토·교통·인프라 부처(MLIT) 그리고 MHPHT가 온라인 신청과 고지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METI는 2001년 6월 18일에 시작하였고, MLIT는 2001년에, MHPHT는 2002년 3월에 시작하였다. 그리고 MHPHT는 ‘전자신청에 대한 실험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험으로써 온라인 신청 절차를 경험하게 하였다.

초기 프로젝트로써 뉴미디어 개발 협회는 ‘다목적 전자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발하여 IT 촉진기관에 보조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XML 프로토 타입 온라인 신청시스템이다. 그리고 협회는 이미 개발된 다목적 내용물을 제공하고, 일반 공공인들에 대한 서류와 매뉴얼과 관련되어 있다. 다목적 신청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응용 서류처리 기능(XML 기준을 갖춘),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리기능 그리고 시스템 유지 지원기능을 갖추고 있다.

3. 세금 파일

1998년 3월, 국세와 관련한 전자 부기를 위한 승인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수정법안에서 세금납부자들은 세금 징수 기관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보고서 서류를 대체할 전자 문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이래로 국세청에서는 전자 세금 파일과 반납 절차를 연구하였다. 이것은 ‘전자세금 파일 절차에 대한 연구 그룹’에 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2000년 재무성은 2000년 9월 29일 발표하여, 모든 세금납부자들에게 2003년에서 2004년 3월까지 연간 수입 세금 반납을 온라인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공공 서류를 전자적으로 허가와 처리하려는 계획을 하였다. 내각에서는 국세와 관세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 1,233개 항목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각은 온라인 처리리스트에서 1개 항목(일본 국민들이 일본을 떠나고 들어 올 때 적용하는 외국환과 외국무역법과 관련한 절차)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대면 확인이 필요하였다.

2001년 이래 세금 담당자들은 온라인 세금 파일과 이미 선택된 세금납부자 집단의 반납 절차들을 테스트해 왔다. 또한 2001년 3월 27일 정부는 자문위원회를 구축하여, 지방세의 전자적 파일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지방세의 전자적 파일

촉진 위원회는 가쿠슈인 대학 교수인 히로시 카네코가 의장이고, 거주자 세금, 지방 법인세 그리고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자문위원회는 MPHPT에 의해 구축되었고, 2002년에 전자 세금파일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2003년 초에 운영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MPHPT, 도지사 협회, 일본 도시 시장 협회, 타운과 마을 시장 협회, 지방 세금 전문가와 학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위원회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적으로 세금 데이터를 검색하고, 세금납부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에는 오카야마와 카나가와 도도부현이 선택되어, 이 분야에서 지방세의 온라인 파일 실험 대상이 되었다.

4. 전자 임금 지불

일본 정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임금 지불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면허자들과 인증자들에게 온라인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2003년부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되었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서비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정부는 또한, 금전이 이전되는 임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현금이나 우편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에 의해 제공받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정부 부처에 가든지 메일로 돈을 부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수입 펀드 전자기부 신청 시스템도 200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5. 전자입찰(내부 입찰);전자조달

1999년 카나가와 도도부현내 요코수카 시는 계약자들에게 공공업무 프로젝트들을 인터넷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일본에서는 최초로 입찰자의 숫자를 증대시키고 경쟁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자체 정부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계획된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건축 회사들은 입찰 신청서들을 스크린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당시 완전한 전자입찰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중에 작성한 입찰견적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정부는 목격자들 앞에서 봉투를 개봉하여 성공

적으로 입찰자들과 입찰 가격을 결정하였다. 결과에 대하여 웹사이트로 즉시 보고되고, 모든 입찰자 명단과 입찰 가격들이 다음 날에 공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자들은 시청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시청 공무원들의 입찰 관련 보고서 업무는 대폭 줄어들었다.

요코스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왜냐 하면 시청에서 입찰 준비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에 활발하게 투자하였기 때문이었다. 1999년 도입된 새로운 입찰 시스템으로 인하여 시청에서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조건들을 만들었고, 모든 회사가 그것들을 보게 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렇게 정보를 통하여 입찰 과정의 개선된 투명성으로 인하여 계약자들에게 입찰 준비를 하지 않게 되었다. 입찰 시스템의 개혁과 인터넷의 이용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마다 입찰자들의 숫자가 1997년 9명에서 1999년에는 24명으로 증가하였고, 시청에서는 공적 작업 예산의 3.1백만엔(미화 28.4백만 달러)을 줄였다. 요코스카의 사례에서 보듯이 IT 이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었고, 시스템 개혁으로 인하여 투명성과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2001년 9월 요코스카 시는 완전한 온라인 입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1년에는 요코스카 시의 거의 모든 공적 업무가 온라인으로 계약하게 되었다(거의 600개). 따라서 시와 계약자 모두가 전자적으로 서명하였고, 시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마다 약 10 조엔 가치가 있는 공적 업무 규칙조항을 처리하는 건설성 내각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또한 내각은 공적 작업 프로젝트 단계에서 모든 절차들을 인터넷으로 수행되기를 원했고, 2001년에 몇 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2004년에는 모든 공적 작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과정을 완전히 디지털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 10월 MLTI는 공공 건축 작업에 대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까지 건설성 내각은 지방정부의 업무를 포함한 모든 공공 작업 프로젝트들에 대한 절차를 디지털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002년 4월 23일 오카야마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신입고등학교에 이미 계획된 부가서류에 대한 건축 계약에 대하여 전자 입찰을 개설하였다. 도도부현은 시설 계약에 대한 입찰을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오카야마 시는 이러한 시스템을 시행한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최초였다. 시는 미래에 공공 업무들에 대한 모든 입찰을 위해 이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업들은 설치된 도도부현 서버를 이용하여 입찰 가격을 포함한 모든 입찰을 하고 있었으며, 입찰 이전에 나누어 준 IC 카드를 이용하고 있었다. 결과적

으로 모든 도도부현 정부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도도부현은 전자 입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30백만엔을 투자하여, 입찰에 임하는 모든 회사들을 확인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6. 지리정보시스템

2001년에 MPHPT는 GIS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실기 시험을 지원하였다. 실기 시험에 근거하여 MPHPT는 GIS에 대한 공동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지자체 수준에서 GIS를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지자체 수준 사례로써 치바 도도부현에 있는 우라야쓰 시는 1998년에 지방자치 내각에 의해 종합적인 GIS 실기 시험에 참가자로 지명이 된 적이 있었다. 종합적인 GIS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 타운에서 토지 계획, 도로 유지, 재산세와 위험방재 등에 관한 업무들이 지원되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6개 내각(현 토지내각), MLIT(METI), 운송 내각(MLIT), 우정 내각(MPHPT), 건설 내각(MLIT) 그리고 지방자치 내각(MPHPT) 등에서 GIS에 대한 ‘실기 테스트’를 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결과로써 도도부현내 시범지역들이 테스트를 하였다. GIS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고, 그 이후 1995년 한신 지진에 의해 파괴된 도로를 유용하게 추적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였다. GIS 이용으로 알려진 도시들로는 효고 도도부현내 니쉬노미야와 오사카 도도부현내 토요나카 등이다.

7. 사이버 공증

공증법이 수정됨에 따라 법무 내각에 의해 임명된 공증인들이 전자 서명을 한 전자 서류(공공 서류를 제외)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월 15일 사이버 공증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 공공시설을 방문하는데 번거로움을 줄여주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공증인들이 서류 절차들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류를 받고, 확인 날짜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서류에 대한 거짓과 손실로부터 야기하는 논쟁을 줄여나갔다.

8. 온라인 정보검색; e-FOIA

내각과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수단과 미디어를 통하여 행정정보의 구축을 촉진하였다. 1997년 340개 조직체들 즉 내각과 행정기관, 국내 대학들, 연구기관들이 언론 발표문,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요구하는 정보들, 통계자료들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였다(행정관리기관, 1998). 또한, 백서나 연간 보고서들이 CO-ROM과 다른 전자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더욱이 바람직한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폭넓은 국가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위치시스템의 동일 명세서'(1996년 6월 18일 내부 내각 연락협의회에 의해 채택됨)에 의해 각 내각과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의 검색시스템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현 관리 및 조정기관이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향상시키고, 각 내각과 행정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도록 하여,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였다.

2000년 8월 28일 'IT 혁명과 함께 LPEs의 정보화 본부의 결정'에 의해 행정서류의 전자적 비축이 시행되었다. 2001년 3월 29일 내부 내각연락협의회에서는 행정정보의 전자적 비축에 대한 '기본 개념'(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그 개념에 의해 행정정보의 전자적 비축이 보다 촉진되어, 행정정보를 이용하게 되고 투명한 공공행정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내각들과 행정기관들은 전자적 비축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였다.

몇몇 도도부현과 지자체들은 이미 완전한 온라인 신청과 공표시스템(e-FOIA)을 도입하였다. 2000년에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 조사된 37개 도도부현 중 거의 3%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지자체들에서는 나라 도도부현 카시하라 시가 e-FOIA를 도입하였다.

9. 지능운송시스템(ITS)

현 운송 내각은 ITS를 연구 또는 개발하였다. '지능운송시스템의 촉진(1996년 7월)과 '도로, 교통과 운송수단의 정보화 가이드라인 수립'에 근거하여 내각 즉 MLIT은 ITS 개발을 촉진하였다. 2001년 봄 이래로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였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무선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이용한 IC 카드를 가지고 통행료를 지불하였다.

V. 참여자

1. 공공관리, 내무, 우편 및 통신 내각

MPHPT는 일본 시민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는 행정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 시스템에는 다양한 행정업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시스템, 지방행정과 재정, 선거, 화재/위험방재, 행정 커뮤니케이션, 관리와 조정, 지방자치의 실현 그리고 우편서비스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이다.

MPHPT는 전자정부와 전자 지자체를 실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MPHPT는 2000년 중앙정부의 개혁기간에 다양한 내각 즉 우정 내각, 지방자치 내각 그리고 관리 및 조정기관 등으로 만들어졌다. 현 행정관리기관은 행정조직, 효율성의 개선 그리고 행정 검열의 운영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 비록 지방자치 내각이 도도부현과 지자체들에게 상당한 자치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지만, LPEs의 재정적 자원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여전히 재정적으로 의존해 있다.

2. IT 전략 본부와 IT 전략 위원회

이미 언급한대로, 2000년 모리 내각아래 IT 전략본부와 IT 전략 위원회는 총리 내각 수준에서 조직되어 있었다. 전략본부와 전략위원회는 매우 정치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한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문을 통하여 전자정부를 실현하려는 목표들이 매우 강하게 증대되었다. 전략 본부와 전략 위원회는 전자정부에 대하여 중요한 정책을 논하고, 특히 전자 일본 전략의 초안 즉 IT 기본 법안과 종합적인 IT 법안을 제정하였다. IT 전략 위원회와 IT 전략 본부의 합동 모임에서 ‘기본 IT 전략’ 계획이 2000년 11월 27일 채택되었다.

이러한 상당한 정치적인 우월과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정부는 중앙정부의 내각과 행정기관 즉 공공단체 그리고 일본에서 모든 LPE를 통하여 포괄적인 상의하달식 집행을 추진하였다. 또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결과로써 기본 IT 전략은 상당

히 높은 우월적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일본 산업 대표들이 IT 전략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행정정보화에 대한 내부 내각 연락 협의회

내부 내각 연락 협의회는 1983년 조직되었다. 조직 구성원들은 모든 내각과 행정 기관들의 장관 혹은 정보화와 관련한 높은 지위의 능력있는 관리 그리고 MPHPT에서 공공행정 관리와 조정 내각 비서들이다. 협의회는 효율적으로 조정된 정보화와 컴퓨팅 시스템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협의회는 정보화와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2002년 7월 30일 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내부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정책 집행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어떤 목표 즉 정보화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들을 투명하게 하고, 스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정부를 위해 종합적인 내부 행정부서를 강화하고, 내부 내각 협력 및 조정부서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들이 수립되었다.

4. 지방정부 시스템 개발 센터

1970년 5월 1일에 지방정부 시스템 개발 센터(LASDEC)가 창설되어 LPEs와 협력하고, LPEs의 정보화를 특히 컴퓨터와 LANs 등의 도입됨으로써 지원해주고 있다.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LASDEC는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정보를 위해 중앙 정보처리 센터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이래 LASDEC는 LPE 지원 프로그램 즉 지자체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 정보 서비스, 세미나, IT 전시 등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전자 지자체를 지원 촉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또한, LASDEC는 최근에 ASP 시스템을 통해 LPEs을 위해 몇 개의 중요한 동일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원서비스와 기능을 가지고 전자 지자체들 특히 중·소규모 지자체들의 발전이 촉진되고 향상되었다. 일본 행정 시스템에서 임명된 개인들은 국가와 개인부문간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LASDEC는 임명된 개인 실체들의 중요한 사례로써 정부 정책집행과 개인(혹은 지방) 간 조정과 연결해 주었다.

5. 정부와 비즈니스 간 가까운 파트너십

일본 정부의 역할에서 중요한 특징은 개인 부문과 매우 가까운 파트너십이다. 즉 정치인, 관료와 기업인을 포함한 소위 '3자 연합'은 신비로운 과정이 아니다. 이러한 삼각 관계는 인사교류의 실현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개인 부문은 종종 인사관리에 있어 정부에 도움과 지원을 하게 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에 능력있는 인사를 보내기도 한다. 우선 개인 법인은 종종 시민 서비스로부터 은퇴한 정부 인사를 고용한다. 이러한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산업체와 정부 내각들간의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아마쿠다리 즉 '천국으로부터 세습'이라 부른다. 둘째, 개인 법인들이 정부에 정책형성에 필요한 보고서와 통계자료들, 새로운 법률 초안, 예산정책 계획 혹은 행정 가이드의 발간 등을 제공한다. 셋째, 공공부문에 관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게 한다.

정부와 개인 비즈니스, 내각들간의 친밀한 관계를 '교세이 시도우'라 한다. 즉 이것은 개인 법인들에게 행정적인 안내를 한다거나 소위 자발적인 조치들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적인 안내는 내각들과 개인 법인들간 동시적 동의와 협력하는 방법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강요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서로간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적 안내 기능은 법적인 효과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몇몇 읍저버들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일본 국민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비공식적인 협상에 익숙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명령을 받을 때도 국민들이 공공관료들의 충고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비즈니스 기업들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경제조직 연맹(케이단렌)은 IT 파급을 지원하는 개혁 보고서 패키지를 만들었다. 2000년에 인터넷에 근거한 전자정부를 구축하였다. 경제조직 연맹은 개인과 법인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모든 절차를 요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등록을 전자양식으로 해서 2004년 3월 말까지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때에는 9,089개 신청 및 등록 중 110개만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였다. 이 패키지에서 경제조직 연맹은 신청과 등록이 처음으로 바꿀 때 정부에게 광범위 분야로 즉 거주자 카드, 가족 등록, 수입/수출 승인 등 우선권을 주도록 하였다. 경제조직 연맹이 요구대로 제안서에는 온라인 세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금 징수의 비용을 줄였다.

VI. 실행 통제/가이드

전자 일본 전략은 IT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시각에서 기본법에는 구체적인 규제 사항이 없고 오히려 정책 안내서가 들어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다른 공공 법인 등)간 온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 중앙집중적인 통제하에서 법적으로 규제 지침 등이 없지만, 충분히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의 재정적 힘으로 전자정부와 전자지자체를 움직여 왔다. 능력있는 내각에 의해 통제되어 온 지방공공 재정 때문에 전자정부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효율적이다.

특히,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앙집중식 제도화된 시스템들 즉 거주자 등록 네트워크, LGWAN과 정보와 컨설팅 센터로부터 제공된 ASP 시스템 등이 실행되었다.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족의 강한 영향으로 지자체의 기술적, 인적, 재정적 자원을 절약하는 중앙 집중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지자체에 대한 자치 정부를 움직여 왔다. 비록 지자체와 도도부현 행정 실천간의 불협에도 불구하고, 전자 일본의 전략 실현은 이러한 정부 수준에 깊이 스며들 수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인프라와 정보시스템 촉진에 근거한 기준들은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PKIs들(조직과 시민을 포함함)이 동일 시스템 개발과 기준설정에 의해 강하게 촉진되었다. 더구나 중앙정부는 몇몇 지자체와 전자 회사들과 함께 주요한 전자정부 신청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실기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테스트로부터 얻은 노하우와 공동 기준을 통하여 능력 있는 내각들이 LPEs 내에 동일하게 실행하였다. 또한, LASDEC와 같이 임명된 개인들은 중·소규모 지자체들을 위하여 충분하게 지원과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자정부와 전자 지자체가 목표를 두고 비율 혹은 인원 등에 의해 시간제한 조치, 목표설정들이 실행되고 규제 조치를 해 왔다. 온라인과 관련한 규칙과 예외 조항들이 과감하게 바뀌고, 보고서에 의한 절차가 예외이고 온라인 절차들이 규칙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MPHPT는 전자정부와 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들을 해마다 시행하였다.

VII. 결 론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 즉 공공 조달에 있어서 촉진자, 비즈니스 파트너, 시민을 위한 중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증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정보권, 정보의 자유,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 권한에 근거하여 우리들은 전자 비즈니스와 전자정부에 필요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으로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개발하였다. 전자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두를 위한 전자정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본정부는 정보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약자들에게 공공 키오스크 터미널과 시민 뷰로 등을 구축한다거나 IC 카드와 카드인식장치 등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증인과 지원자로 활동하였다. 모든 시민들이 네트워크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치들을 가졌다. 아울러, 전자 비즈니스로의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공공재정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 재정여건과 관련하여 1964년 이래 국가 신용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부는 1985년에는 34백만엔으로, 1987년 말에는 373억엔으로 재정을 만들었다. 2001년 말에 국가 부채가 11.67조엔이 증가하여 2002년 말에는 643.19조엔에 달했다. 국가 부채 중에는 국가 펀드가 14.25조엔 증가한 492.59조엔에 달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자정부와 전자 지자체들에게 공공재정을 지원하려는 기대를 할 수 없었다. 공공재정과 관련한 상황 여건에서 중앙정부는 분권화 개혁과 지자체 합병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 중앙정부는 합병 요청을 하였고, LPEs의 숫자를 3,218개에서 1,000개로 줄여나갔다. 합병은 지자체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합병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공공재정으로부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합병은 2005년 3월 종료되었다. MPHPT의 조사에 따라 2001년 12월 말까지 합병을 논의하는 스터디 그룹과 위원회 같은 연합체를 만든 지자체 숫자가 2,026개에 달하였다(전체 지자체의 62.9%). 이러한 연합체가 440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 지자체 정책과 전략이 정해진 기간내에 실행되기는 불투명하였다.

참고문헌

- EI Kahal, S(2000). 'Japan' in J.A. Chandler(ed).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Institute of Administrative Management(1998).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Reform in Japan, Tokyo: IAM(1998).
- Isozaki, Y.(ed)(1997). The Local Administration in Japan. Tokyo: Gyousei.
- Jichi Kenshu Kyoukai(ed)(2001). IT Kakumei eno Taiou(Correspondences to IT Revolution). Tokyo: Jichi Kenshu Kyoukai(in Japanese).
- Kamino, K.(ed)(2002). Higashi Asia niokeru Gyousei no Jouhouka to Kouhou(Digital Government and Public Law in East Asia). Hagoya: CALE(in Japanese).
- MPHPT(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200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Japan. White Paper.
- Nihon Nouristu Kyoukai Denshika Consortium(ed)(2002).E-government Denshi Seifu/Jichitai Guide 2002(Guidebook of e-government and e-Municipalities). Tokyo: JMAM(in Japanese).
- NTT Communications Solution Jigyoubu(ed)(2002). Denshi Jichitai Dounyu no Tebiki(Guide to Introduction of e-Municipalities). Tokyo: Nikkei BP(in Japanese).
- Shimada, T.(ed)(2001). Jouhou Gijutsu wo Ikasu Jichitai Senryaku(IT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Tokyo: Gyousei(in Japanese).
- Tagaya, K.(ed)(2002). Denshi Seifu/Denshi Jichitai(e-government/e-Municipalities). Tokyo:Dai-ichi-houki(in Japanese).